



# 학교폭력, 학교 담장 넘어 법정 다툼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이 광주에서도 학교 담장을 넘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분이 생활기록부 기록에 남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체 해결보다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진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아들을 위해 수년간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사

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와 관련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46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학폭위 재심제도가 폐지되면서 그해 6건에 불과하던 행정심판과 소송이 2021년 3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6건까지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따스음 등을 넘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랜선서플’, 단체 채팅방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서부·동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276건(2020년)~605건(2021년)~633건(2022년)으로 매해 늘고 있다.

문제는 학생간 다툼이 사소하거나 경미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학폭위 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각한 학교폭력이었으면 경찰 수사로 번질 것이지만, 대부분 학교 밖으로 나올 만큼 큰 사건은 아니다”면서 “학부모 간 감정싸움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광주 3년세 소송 6건→46건

학폭위 논의 땀 생기부 기록 남아

일부 학부모들 시간별기 소송도

학폭위 결정 불신도 한몫

초동조치 때 법률가 조력 필요

많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로 학교장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불복하면 교육지원청 단위 학폭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학폭위 논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흔적이 남는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 기록이 남으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입을까 봐 관련 기록을 어떻게든 지우기 위해 소송을 불사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소송의 주된 원인은 교내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학폭위 구성과 절차의 한계나 하자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는 학폭위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하고 소송을 연장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대학입시까지 시간을 버는 방식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생이던 A(20)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학폭위의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갔다.

A씨의 항소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유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폭위는 2021년 4월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제8호 조치인 ‘전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처분에 불복해 2021년 7월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

고 기각되자 곧바로 법원으로 달려갔다.

A씨는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전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되자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부가 지정됐지만 지난 2월 말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 시점이 대학입시 전형이 끝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생활기록부에 ‘전학 처분’이란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철 광주지방법변호사회 부회장은 “교내 학폭위 구성원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초동조치시 법률가가 함께 들어가면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열차 운행시각 1일부터 변경

철도 안전 강화대책 따라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가 3월 1일부터 열차 운행 시각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정 대상 열차는 총 138개로 호남선 80개, 전라선 56개, 경전선 2개 등이다. 이들 열차는 출발·도착 시각이 평균 3분 안팎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대책으로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수도권 구간 낮 시간대 선로점검 시간(1시간)을 확보하고, 선로개량 공사에 따른

서행 등을 반영해 열차 운행 시각을 조정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지용태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장은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간표 사전 확인해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며 “운행 시간 조정에 따른 고객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운행 일정은 코레일 누리집(www.letskorail.com)이나 승차권 앱 ‘코레일톡’, 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진 대비 학교 건물 내진 공사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중학교가 지진 대비 건물 내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회원제 약속 깬 골프장, 손해배상해야”

광주지법 “퍼블릭 변경 등의 안한 기준회원 지위 유지”

골프장이 운영방식을 회원제에서 퍼블릭(대중제)으로 변경할 때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회원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노재호)는 A씨 등 67명이 전남의 한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1990년~1998년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원을 내고 정회원 계약을 맺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받아 그린피 할인, 우선 예약 적용 등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던중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2020년 동의하지 않

은 회원들에게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으며 계약해지 통보에 이어 2021년 1월부터 회원혜택을 중단했다.

이에 A씨 등은 “골프장 회칙상 회원만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회사는 갹신 거절권, 해지권이 없다”며 “할인가보다 사용료를 높게 지급해 재산·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운영사가 만든 골프장 회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골프장 측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올려받았던 차액 등(5270여만원)을 돌려주라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한 우선 예약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진 대비 학교 건물 내진 공사

## 화정아이파크 철거 상생협의체 2차회의 연기

현대산업개발 “철거 마무리후 진행”

붕괴 사고를 겪었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 공사와 관련해 27일 열린 예정이었던 민·관 합동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2차 회의가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서구청, 현장 인근 상인 대표 2명 등이 모여 공사 중 먼지·소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서구청에 회의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계획서, 위해대응방지계획서 등 인허가·서류보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협의체 출범 당시 월 2회씩 회의를 하기로 한 데 따라 다음 회의는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라고 서구청은 전했다.

협의체는 3월 화정아이파크 철거작업 시작을 앞두고 비산먼지, 낙하물 등 위험 요소와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출범했다. 공사장 인근 상인들이 공사 중 콘크리트 가루와 낙하물이 지속 발생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첫 회의 이후 공사장 인근 상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2차 회의부터는 상인 대표 2명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차후 3월에 이따금 철거공사가 시행될지 여부를 3월 초에 시작해 내년 말까지 이어지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재시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비 고
2022타경 73766	1	북구 운양동 395-3 1동5층503호 81.185㎡	85,000,000	
			85,000,000	

**[아파트]**

● 경매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인이 매각요청일자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 사항

- ① 매각의 목적 또는 상기물건의 특성상 주의의 대상과 같이 설명된 낙찰자 및 낙찰 예정인 낙찰자가 낙찰 전 주위주변환경을 확인하고 거주하고 있는 입찰인사나, 사외자 등 낙찰자를 위한 입찰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매각공고에 따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당시에, 한양중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무인방문 인사 접견소(현장)에 비치하거나 방문신청장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대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에 대한 매각결정당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입찰공고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합의하신 낙찰결과도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사람은 입찰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⑤ 소외권인정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만으로도 입찰한 후, 매각결정일자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이 연기됩니다. 단, 도주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았으나 소외된 경우에는 매각이 연기될 수 없습니다.
- ⑥ 공공포괄 용역중에서 매각이된 전세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중지된 경우, 또는 매각공고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이 재개됩니다.
-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이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공고로 하지 않으므로 반원에 비추어 나 방문신청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결정당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좌주차기, 좌주차기, 좌주차기 차량을 포함하여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장을 반환합니다.
- 매각이일 공고의 유지는 대한민국 법원 방문신청장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검색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방문신청장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방문신청 접수후에 한정하여 공지 하는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매각신청이 신청이나 불고, 대공판결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공정은 물론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관하여서 게시된 매각이일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당시 등을 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상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